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철회촉구 결의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5. 7. 12

나. 제안자 : 정영태 의원 등 28인

다. 상정 및 심사·의결

○ 상 정 : 2005. 7. 13(제12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의 결 : 2005. 7. 13(제12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자 : 정영태 의원

나. 제안이유

- 국회는 2005년 6월30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정수 대폭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정치적 야합으로 통과 시켰음.
- 이는 국민적 공론과 합의 없이 15년 지방자치의 역사를 부정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을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시켜 지방의회를 장악하려는 음모이자 국민에 대한 노골적 기만행위임.
- 이에 부천시의회는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중앙 예속구조를 심화시키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정원감축 등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의 지방의회 등 전 국민과 함께 공동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함.

다. 주요골자

-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중앙 예속구조를 심화시키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적극 반대
-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고 과도한 선거비용만 초래하는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적극 반대
- 정당구조에 묶여 자기 몸집만 키우는 국회의원, 광역의원의 합리적 정원감축 없이 힘없는 기초의원만 감축시키는 ‘기초의원 정원 감축’적극 반대
- 국민적 공론과 합의 없이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국민을 기만하고 지방자치 15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 함.

3.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4. 심사결과 : 원안의결

5. 소수의견요지

○ 없 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철회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제416호
의결 년월일	2005. 7. 15 (제120회)

제안년월일 : 2005년 7월 12일

제안자 : 정영태 의원 등 28인

1. 주 문

부천시의회 의원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대폭 감축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 및 폐지를 촉구한다.

2. 제안이유

- 국회는 2005년 6월 30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정수 대폭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정치적 야합으로 통과시켰음.
- 이는 국민적 공론과 합의 없이 지난 15년의 지방자치 역사를 부정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을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시켜 지방사회를 장악하려는 음모이자 국민에 대한 노골적 기만행위임
- 이에 부천시의회는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중앙 예속구조를 심화시키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실시, 중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정원 감축 등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의 지방의회 등 전 국민과 함께 공동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함

3. 주요 골자

-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지방의원의 중앙 예속구조를 심화시키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적극 반대
-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고 과도한 선거비용만 초래하는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적극 반대
- 정당구조에 묶여 자기 몸집만 키우는 국회의원, 광역의원의 합리적 정원 감축 없이 힘없는 기초의원만 감축시키는 기초의원 정원 감축 적극 반대
- 국민적 공론과 합의 없이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국민을 기만하고 지방자치 15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함.

4. 붙임 :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철회추구 결의문안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철회촉구 결의문

2005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전면실시, 중선거구제 도입, 정원의 대폭 감축 등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본질을 전도시키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뿌리 채 뽑아버린 폭거이자 우리나라 지방자치 15년 역사를 유린한 국회의 쿠데타이다.

집권여당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정당공천을 배제하겠다는 당론을 펼쳐왔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당리당략에 의해 기초의원까지 전면적인 정당공천제를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국민적 공론과 합의 없이 지난 15년의 지방자치 역사를 일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엎어 버린 중앙정치권의 만행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국회가 기초의원정당공천제를 전면실시하기로 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기초의원을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시켜 지방의회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책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기초의원 유급제라는 당근으로 위장하여 정당공천제 등의 개악을 몰타기하려는 치졸한 정치적 기만술에 불과하다.

개악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기초의원마저 중앙정치권에 정당의 이름으로 줄 세우기를 하고 돈 많은 지방재력가들만의 리그전으로 전락시켜 건강한 신인정치인의 진출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중앙정치권에 지방이 휘둘러서는 결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정당공천을 전제로 한 중선거구제 실시는 힘센 정당기리 나눠 먹기 하겠다는 속셈이며 지방의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음모이자 국민에 대한 노골적 기만행위이다.

이에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86만 부천시민을 대표하여 30년 만에 부활되어 피와 땀으로 가꾸어 온 지방자치 15년의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고 지켜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천시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중앙 예속구조를 심화시키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적극 반대한다.

하나, 부천시의회 의원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고 과도한 선거비용만 초래하는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적극 반대한다.

하나, 부천시의회 의원은 정당구조에 묶여 자기 몸집만 키우는 국회의원, 광역의원의 합리적 정원 감축 없이 지방자치의 미세혈관인 기초의원만을 감축시키는 기초의원 정원 감축을 적극 반대한다.

이와 같이 부천시의회 의원은 국민적 공론과 합의 없이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국민을 기만하고 지방자치 15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정원 감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부천시의회 의원은 전국의 지방의회는 물론 올바른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 사회단체 등 모든 국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국회의 음모에 맞서 공동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5. 7. 15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